

## 2020년 3월 모의고사 #16~21

### 조세와 관련된 균등 희생의 세 원칙

#### Pre Reading Activity(읽기 전 활동)

-세금은 공평하게 내야 한다.

당신이 1년에 1억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 보자. 당신은 세금을 1년에 1000만원을 낸다. 하지만 영화배우 A씨는 1년에 100억원을 번다. A도 세금을 1년에 1000만원만 내면, 그것은 공평한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존 스튜어트 밀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대원칙을 제시하였다 :  
“세금을 낼 때 사람들의 희생은 균등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균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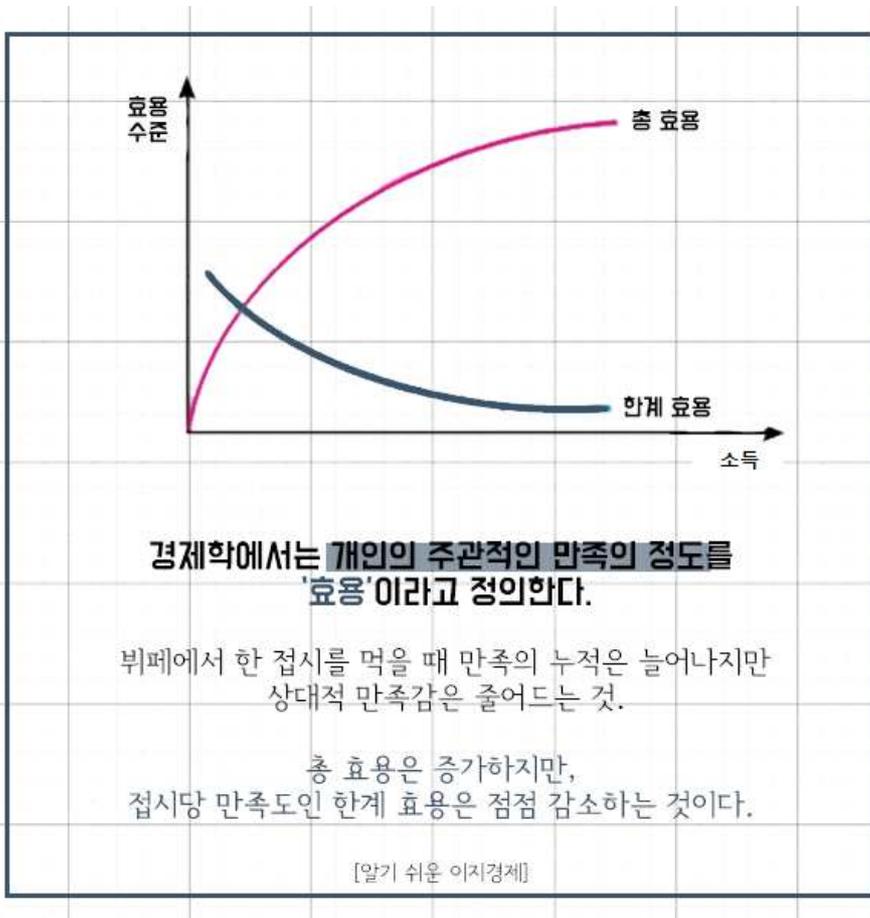
①희생한 크기의 균등	(사람들마다) 세금을 납부하면서 희생한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②희생한 비율의 균등	세금을 납부하면서 희생한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
③희생한 결과의 균등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결과가(=남아 있는 소득의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이번 제시문은 “세금을 낼 때 사람들의 희생은 균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균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며 재미있게 설명한다. 제시문을 모두 읽고 생각해 보자. ‘균등’에 대한 어떤 해석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적절할까?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해석을 하고 있을까?

### -소득의 한계 효용('소득' vs '소득에 대한 효용')

'효용'이란 만족감이다. 하지만 1만원이 주는 효용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돈이 이미 많은 사람일수록, 추가적인 1만원에 대해서 효용은 더 작게 느낀다.

당장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1만원이 꽤나 큰 효용을 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사장님들은 이미 재산이 500억원이 있고, 따라서 1만원을 추가로 받아봤자, 추가되는 효용은 별로 크지 않다. 당연하지 않은가? 즉,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은 소득이 커질수록 점점 줄어든다.



이때, “세금을 낼 때 사람들의 희생은 균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떠올려 보자. ‘균등’과 관련한 해석은 3가지였다 : ①희생한 크기의 균등, ②희생한 비율의 균등, ③희생한 결과의 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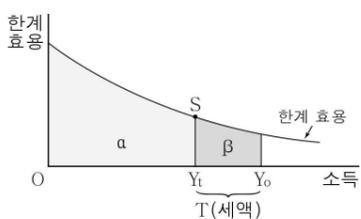
이 제시문에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소득에 대한 희생이 아니라 효용에 대한 희생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가 균등희생과 관련하여 ①의 견해를 받아들일 때, 사람들마다 희생한 소득의 크기(x축)가 균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희생한 효용의 크기(y축)가 균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② 산출된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한계 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도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 세율,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실효 세율 등이 있다.

[A] 다음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 보자.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 표준 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0%,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20%라 하자.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1천만 원×0.1(10%) + 2천만 원×0.2(20%) = 5백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평균 세율은 약 16.7%(5백만 원/3천만 원)가 된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리주의자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다. 이를 균등 희생 원리라고 하는데, 밀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누진 세율 구조를 ③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희생이란 세액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이다.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이에 후대 학자들은 균등의 의미를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에 ④ 입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림>

균등한 희생과 관련 있는 세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1단위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_0$ 였던 사람이 세액  $T$ 를 내면 세 후 소득이  $Y_t$ 로 줄어든다.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beta$ 로 나타낼 수 있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누진 세율 구조라고 ⑤ 단정하기 어렵다. 절대 희생 균등 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은 1% 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만 누진 세율 구조가 ⑥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누진 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이는 <그림>에서 면적  $\beta$ 를 면적  $\alpha + \beta$ 로 나눈 값인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 아래에서 누진 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지만 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반드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비례 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선분  $YS$ 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길이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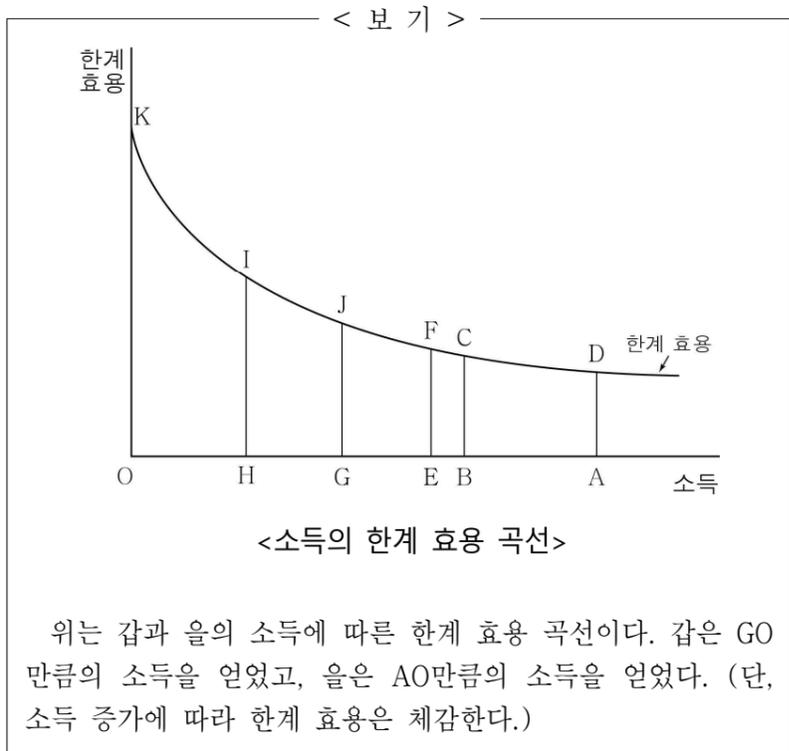
1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본질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 부과와 효율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누진적 조세 부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조세 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며 조세 행정의 목적을 효율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세율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조세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제시하고 조세 부담에서의 균등한 희생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1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평균 세율보다 실효 세율이 더 낮다.
- ② 납세 부담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 ③ 대다수 국가가 소득세에 비례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 ④ 세액 산출 시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누진 세율 구조인지의 여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갑과 을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 ②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과 을이 내야 할 세액이 각각 GH와 AB라면 GHIJ의 면적과 ABCD의 면적이 같아지도록 GH와 AB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 ③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AEFD/AOKD일 때에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진다 면 을에게 AE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 ④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이고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B일 경우 GH를 GO로 나눈 값과 AB를 AO로 나눈 값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 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의 세액이 GH라면 을의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이 HI가 되도록 을에게 AH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낮은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②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③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만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④ 동일한 소득이라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20.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소득세 제도			
과세 표준	(가)	(나)	(다)
100만 원	10만 원	3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6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90만 원	60만 원

위에 제시된 표는 어떤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소득세 제도 (가)~(다)와 그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다. (단, 과세 표준은 위의 3가지 경우만 있다고 가정한다.)

- ① (나)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② (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역진 세율 구조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모든 과세 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④ (나), (다)와 달리 (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세율 구조이다.
- ⑤ (가), (나)와 달리 (다)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세율 구조이다.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산하여 냄.
- ② ㉡: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 ③ ㉢: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섬.
- ④ ㉣: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 ⑤ ㉤: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 본문과 문제 해설

### 본문의 구조

#### <문단별 글의 구조>

글의 구조는 단순하다. 문단1~3에서는 세금(소득세)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대원칙(균등 희생 원리)을 설명한다. 반면 문단4~6에서는 균등 희생 원리에서, '균등'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3가지 원칙을 문단별로 하나씩 설명한다.

문단4는 절대 희생 균등원칙을 설명한다. '균등'을 희생의 절대적 크기의 균등으로 본 것이다.  
문단5는 비례 희생 균등원칙을 설명한다. '균등'을 희생 비율의 균등으로 본 것이다.  
문단6은 한계 희생 균등원칙을 설명한다. '균등'을 과세 이후의 한계효용의 균등으로 본 것이다.

문단1		-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과세표준, 한계세율)
문단2		-문단1의 개념을 이용한 실제 세금 계산의 사례  -세율구조에 대하여 : 누진세율구조, 비례세율구조, 역진세율구조
문단3		-밑의 "균등 희생 원리"의 내용 ⇒ '균등'의 의미에 대한 논쟁 : ①절대희생균등 ②비례희생균등 ③한계희생균등
문단4	'균등'의 의미에 대한 논쟁	-①절대 희생 균등 원칙 : <u>희생된 효용의 절대량(=크기)가</u> 사람들마다 균등해야 한다.
문단5		-②비례 희생 균등 원칙 : <u>총효용 중 희생된 효용의 비율이</u> 사람들마다 균등해야 한다.
문단6		-③한계 희생 균등 원칙 : <u>과세 이후 한계효용의 크기가</u> 사람들마다 균등해야 한다.

## 본문 해제

[1문단]

세율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한계 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도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 세율,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실효 세율 등이 있다.

[1문단 해설]

문단1에서는 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총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총소득-공제)에 대해 세율을 적용
X	O

또한, 납세자가 내는 세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한계세율이 활용된다. 한계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text{한계세율} = \frac{\text{세액의 증가분}}{\text{과세표준의 증가분}}$$

[2문단]

다음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 보자.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 표준 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0%,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20%라 하자.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1천만 원  $\times$  0.1(10%)+ 2천만 원  $\times$  0.2(20%) = 5백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평균 세율은 약 16.7%(5백만 원 / 3천만 원)가 된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2문단 해설]

문단2는, 문단1의 설명을 바탕으로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10%와 20%는 한계 세율이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모두 계산한 이후에, 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는 16.7%는 평균 세율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또한, '누진세율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누진세율구조'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세율과 세액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세율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세율'이다. 누진세율구조가 아닌 비례세율구조 혹은 역진세율구조라도,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세액'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것은 오직 누진세율구조 뿐이다.

★누진세율구조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
비례세율구조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일정
역진세율구조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감소

[3문단]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리주의자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다. 이를 균등 희생 원리라고 하는데, 밀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누진 세율 구조를 ①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희생이란 세액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이다.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이에 후대 학자들은 균등의 의미를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에 ②입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3문단 해설]

문단3은 밀의 균등 희생 원리를 제시하고, '균등'에 대한 해석상 논쟁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밀의 “균등 희생 원리”

: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

이때 경제적 희생을 세액 자체의 손실이 아니라, 세금납부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으로 정의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이해해야 이후 문단4~6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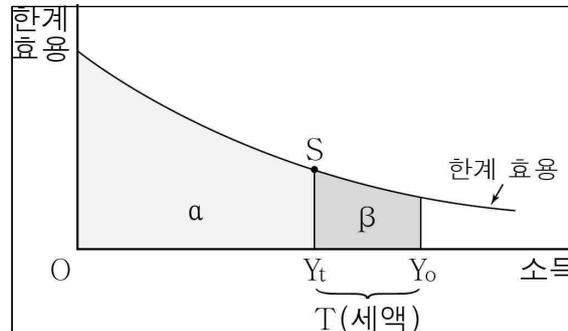
균등 희생 원리에서 말하는 '희생'의 정의에 대해서	
세액 자체의 손실	세금납부로 인한 효용의 감소분
X	O

그리고 '균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 ①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②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③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의 3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단4~6에서 설명된다. 문단3의 말미에서는 이 3개 원칙들의 공통된 가정만을 설명하고 있다.

\*3개 원칙들의 공통된 가정

-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한다.
- 효용은 측정가능하다.
- 소득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 모든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

[4문단]



<그림>

균등한 희생과 관련 있는 세 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1단위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_0O$ 였던 사람이 세액  $T$ 를 내면 세후 소득이  $Y_tO$ 로 줄어든다.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beta$ 로 나타낼 수 있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누진 세율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절대 희생 균등 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은 1% 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만 누진 세율 구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누진 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4문단 해설]

문단4는 '균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을 설명한다.

①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은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절대적 크기)'이 사람들마다 균등해야 한다고 본다. 면적  $\beta$ 가 사람들마다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고소득자의 '세액'은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지겠으나, 세율구조는 필연적으로 누진세율구조인 것은 아니다. 소득 1%증가분에 대해, 한계효용이 1%이상 감소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누진세율구조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5문단]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이는 <그림>에서 면적  $\beta$ 를 면적  $\alpha+\beta$ 로 나눈 값인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 아래에서 누진 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반드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비례 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5문단 해설]

문단5는 '균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②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을 설명한다.

②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은 총효용 중 희생된 효용의 비율이 사람들마다 균등해야 한다고 본다. 즉,  $\frac{\beta}{\alpha+\beta}$ 이 사람들마다 균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한계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하면 누진세율구조는 필연적으로 달성된다. ①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과는 다르게, 누진세율구조를 위해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누진세율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①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②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해야 한다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기만 하면 된다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 한다 (소득1% 증가분에 대해 한계효용이 1%이상 감소해야 한다)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

[6문단]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선분 YtS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길이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6문단 해설]

문단6은 '균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③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설명한다.

③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서는, 과세를 모두 한 이후 한계효용의 크기가 사람들마다 균등해

야 한다고 본다. 즉, 세금을 모두 내고 난 이후 선분 YtS의 길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문단3의 말미에서 모든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③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은 개인의 납세 전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납세 이후 소득이 똑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억원을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난 후 5000만원이 남았다면, 1000억원을 번 사람도 세금을 내고 난 후 5000만원이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이다.

\*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 <저자의 특별 질문 : 핵심 쟁점>

Q. 누진세율구조는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금총액’이 증가하는 것인가,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것인가?

A. 누진세율구조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평균세율’이 커지는 것이다.

Q. 밀의 균등희생원리에서, 세금을 낼 때의 ‘희생’이란 세금 액수인가, 세금을 납부할 때의 효용 감소분인가?

A. 세금을 낼 때의 효용 감소분이다.

Q.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과,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 중에서, 누진세율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A.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이다.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에서는 한계효용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야만 누진세율구조를 충족시킬 수 있다. 반면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에서는 누진세율구조가 언제나 충족된다.

## 문제 해제

1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본질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 부과 효율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누진적 조세 부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조세 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며 조세 행정의 목적을 효율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세율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조세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제시하고 조세 부담에서의 균등한 희생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 ① 조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 조세의 경제적 효과(예를 들어, 소득재분배, 국가사업 시행...)가 제시되지도 않았다.
- ② 누진적 조세 부담의 '변천 과정'이 설명되지 않았다. 문단4~6에서는 오직 균등희생원칙에서 '균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하였을 뿐이다.
- ③ 조세 행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④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여러 나라의 사례도 없다.

[정답]

- ⑤ 조세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문단1~3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조세부담에서 '균등한 희생' 중 '균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단4~6까지 세 가지 원칙을 병렬적으로 설명하였다.

1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평균 세율보다 실효 세율이 더 낮다.
- ② 납세 부담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 ③ 대다수 국가가 소득세에 비례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 ④ 세액 산출 시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누진 세율 구조인지의 여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오답]

①문단1의 말미에서 한계세율, 평균세율, 실효세율을 설명하였다. 평균세율은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이고, 실효세율은 '세액'을 과세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과세표준은 과세이전 총소득보다 작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평균세율보다 낮다.

②문단1에 따르면 납세부담액(=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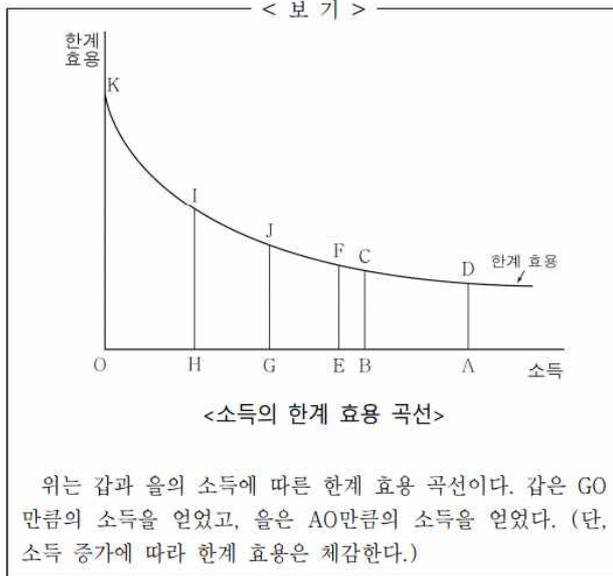
④문단2의 사례에서는 세액 산출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한계세율을 각각 10%와 20%로 적용하고 있다.

⑤적절하다. 문단2의 말미에서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중략)...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정답]

③문단3의 서두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에서는 소득세가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때 누진세율구조에서는 과세표준↑일 때, 평균세율↑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갑과 을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 ②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과 을이 내야 할 세액이 각각 GH와 AB라면 GHIJ의 면적과 ABCD의 면적이 같아지도록 GH와 AB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 ③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AEFD / AOKD일 때에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진다면 을에게 AE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 ④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이고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B일 경우 GH를 GO로 나눈 값과 AB를 AO로 나눈 값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 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의 세액이 GH라면 을의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이 HI가 되도록 을에게 AH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균등 희생 원리에서 '균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단4~6에서는 3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각각의 견해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문단4	문단5	문단6
절대희생 균등원칙	비례희생 균등원칙	한계희생 균등원칙
(한계효용-소득 평면에서) 희생면적의 크기가 동일해야 한다.	(한계효용-소득 평면에서) 희생면적의 비율이 동일해야 한다.	(한계효용-소득 평면에서) 세금납부 이후 한계효용의 크기(y축길이)가 동일해야 한다.
$\beta$ 의 동일	$\frac{\beta}{\alpha + \beta}$ 의 동일	선분 길이(YtS)의 동일

[오답]

①절대희생 균등원칙에 의하면 사람들마다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면적)은 같다. 만약 한계효용곡선이 기울기가 0인 수평선이라면, 똑같은 면적만큼 효용을 희생했을 때, 감소하는 x축 길

이(=세액)은 같다.

②즉, 절대희생 균등원칙에서는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면적)이 같아야 하는 것이다.

③비례희생 균등원칙에서는 사람들마다 희생된 효용의 비율이 같다. 선택지 ③에서는 을의 희생면적이 AEFD일 때 희생된 효용의 비율이 같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희생면적은 AEFD이고, 이때 세액은 AE이다.

⑤한계희생 균등원칙에서는 한계효용-소득 평면에서 세금납부 이후 한계효용의 크기(HI)가 동일해야 하므로, 세액은 AH만큼이 된다. 공산주의인 것이다.

[정답]

④비례희생 균등원칙에서는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이고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B일 경우, 다음이 성립한다.

$$\frac{GHIJ}{GOKJ} = \frac{ABCD}{AOKD}$$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낮은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②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③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만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④ 동일한 소득이라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에 의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세액 = (총소득-공제액) X 세율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세액 = (총소득) X 세율

즉,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누진세율제도의 도입배경, 밑의 균등희생원리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결국 세금을 통해 사람들간의 평등(=균등함)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에는 생활하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②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에서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공제액'이 매우 커서 한계세율이 달라진다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적절하지 않아질 수 있다.

③ 탈세를 막기 위해서 ㉠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계산에서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뿐이다.

④ ㉠에서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금납부 이후 개인 간의 평등을 도모하였다.

⑤ ㉠에서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작은 조세부담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도 아니다. ㉠에서는 '조세의 차등적 징수를 통한 평등 도모'를 추구하였다.

[정답]

① ㉠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동일 소득으로부터 만족감을 조금밖에 얻지 못하므로, 만족감의 수준을 평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세금액수를 줄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누진세율제도의 도입배경, 밑의 균등희생원리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

20.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소득세 제도			
과세 표준	(가)	(나)	(다)
100만 원	10만 원	3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6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90만 원	60만 원

위에 제시된 표는 어떤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소득세 제도 (가)~(다)와 그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다. (단, 과세 표준은 위의 3가지 경우만 있다고 가정한다.)

- ① (나)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② (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역진 세율 구조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모든 과세 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④ (나), (다)와 달리 (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세율 구조이다.
- ⑤ (가), (나)와 달리 (다)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세율 구조이다.

<보기>의 표를 해석해 보자. 소득세 제도 (가)에서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평균세율은 10%이다. (나)에서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평균세율은 20%이다. 반면 (다)에서는 과세표준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일 때 각각 평균세율은 10%, 15%, 20%이다.

(가)	(나)	(다)
비례세율구조	비례세율구조	누진세율구조

[오답]

- ①(나)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평균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구조이다.
- ②(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누진세율구조이다. ('세액'으로 세율구조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오답인 선지이다)
- ③(가)와 (나)는 평균세율이 각각 10%와 20%로 다를 뿐이다. 둘 모두 모든 과세표준에 대해서 각각 동일한 평균세율을 부과하는 비례세율구조이다.
- ④(가)가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나)또한 마찬가지이다. "(나)와 달리"라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 ⑤(가)와 (나)는 과세표준이 증가하여도 평균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구조이다. 반면 (다)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10%, 15%, 20%로 점점 증가하는 누진세율구조이다.

## After Reading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위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율표이다. 1년에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이 6%가 적용된다. 하지만 연간 5억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이 무려 42%이다!! 즉, 1년에 세전 5억원을 벌었을 때, 세후소득이 A라면, 1억원을 더 벌어서 세전 6억원의 소득을 얻어도 세후소득은 A+5800만원밖에 안 된다.

이 정도면 고소득자에게 꽤나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몇몇 국가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하다.

높은 소득에 대해서 너무나도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득을 얻고 난 이후로는 일을 안 하려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매우 능력이 뛰어난 개인들의 근로의욕을 저해시키고, 사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